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최, 2007 국제핵비확산 심포지움 기조연설, 2007년 7월 6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한반도에서의 북핵 위기와 평화

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오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최하는 국제핵비확산 심포지움에서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최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를 통해서 핵 비확산을 통한 평화 추구의 길이 진지하게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1차 핵 위기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하여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로 2002년 10월에 시작된 2차 북핵 위기는 지금 이 시간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다자외교를 통한 해결노력은 4년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다행히도 올해 초에 들어서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위기의 외교적 타결을 관련국가 외교당국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써 또 북한문제를 고민해왔던 국제정치학자로서 최근까지 느껴온 몇 가지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북핵 협상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맥락에서 북핵 문제가 갖는 글로벌, 동아시아, 한반도 차원에서의 의미와 앞으로의 해결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핵 비확산의 의미)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의 핵 비확산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990년대 초 세계 정치에서 냉전이 종결된 뒤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 미국의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핵 비확산이었습니다. 핵이 확산되면 될수록 세계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대전제하에 189 국가가 핵 비확산(NPT) 체제에 가입해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신뢰도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 등 과학기술 발달로 핵 제조 기술이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911 테러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이제 국가들 간의 핵 확산 못지않게 더욱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비국가 단위의 소수 집단들이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게 되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단순히 미국과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21세기 상황은 20세기 냉전상황 못지않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핵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을 훨씬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핵 무장한 북한, 그리고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을 안보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1998년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 정계의 보수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큰 진전이 없었던 미일간의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속화되었고, 일본의 군사적 역량 증대 노력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 더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핵무장에 대한 논쟁이 더욱 불붙을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속화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할 것이고, 아시아 최대강국 일본과 중국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연쇄적으로 대만 및 동남아국가들의 경계심과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정세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화지대(zone of peace)라고 불릴 정도로 서로 평화롭게 잘 사는 유럽과는 정반대로 동아시아 지역은 시대에 뒤진 불안정 지대, 군비경쟁 지대로 더욱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

는 영향은 이처럼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미래에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한국에게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래 남북한 간의 교류는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금강산, 개성공단 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교류 및 이산가족 교류도 부분적으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가장 핵심적인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와는 달리 북한은 군사안보 분야의 남북협력에 대해서 지극히 냉담한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북은 남측을 군사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하려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조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서해교전과 같은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남한을 제치고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주관하는 대표주자로서 자임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핵 보유 능력의 격차로 인한 군사적 불균형 못지않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갖는 외교적 함의입니다.

핵 보유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주변국들은 핵을 고집하는 한, 북한에 대해 결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만난 부시 행정부의 두 전직 고위관료들은 “핵을 가진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가지는 미국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고집함으로써 치뤄야 하는 비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핵 외교 성공을 위한 제언)

이제 그 동안 진행되어온 국제적인 북핵 외교와 관련하여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2003년도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간에 협상다운 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소련을 비

난하면서도 협상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던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사석에서는 북한은 이라크나 이란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외교적 성공이 가능하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업적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미국 정책의 변화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 간의 북미양자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외교적 선회였습니다. 이로 인해 6자 회담이 2월에 재개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213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협상을 통한 본격적인 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10월 9일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야 시작된 북미간의 접근노력이 결국 시간의 부족으로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2007년 1월 시작된 최근의 북미간 협상은 2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중인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어렵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까지 213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상대방의 입지를 고려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이란사태로 어렵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양보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으로 강수로 압박해 최대한으로 받아내고 핵은 적당한 선에서 보유를 인정받겠다고 작정한다면, 그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북 핵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며 또 인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 의해 수시로 비판 받는 크리스토퍼 힐 협상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무리수를 두는 협상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미국 국내의 정치적 비준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 내 협상파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결국 90년대 초이래 추구해왔던 북미관계 개선과 그것을 통한 정치, 경제, 외교적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또 한번 시기를 놓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 북핵 문제가 차기 미국행정부로 넘어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밀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970년대에 닉슨대통령이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경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반공주의자였기에 그가 협상하는 것을 공화당의 강경파나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의 부시 대통령도 대북 강경론자였기에 그가 협상을 허락한 상황에서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2008년 대선을 통해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민주당 정부는 대북 온건정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마치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후 클린턴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북한은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213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신속하게 밟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 공조의 문제입니다. 한, 미, 일, 중, 러 간의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정책공조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협상은 2008년 미국 대선이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마감시한이 정해져 있는 협상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하고도 지난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려면 북한을 제외한 이들 다섯 국가들간의 정책공조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미간의 정책 공조는 최근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북 쌀 지원을 북한의 의무이행과 연계하여 늦춘 올해 초의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틈새를 벌리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협조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6자 회담과 관련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납치자 문제의 해결에 놓고 그것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내부의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에 납치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핵 문제의 해결에 관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일본의 국익 증진에 필수적인 중요 사안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정책의 선후를 조정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한, 미, 일과의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는데 있어서 미국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실제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고 그러한 긴밀한 관계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일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13합의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은 보다 강도의 강, 온 양수를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일본의 군비 강화는 중국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기에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국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마침말)

오늘 해외에서 오신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들께서는 핵 비확산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이 논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비확산이 갖는 국제정치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비확산이 한반도의 미래에 갖는 의미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의 일부에는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핵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한국이든 북한이든 핵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통일 후에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가지거나 핵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통일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 이전에 이태리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독일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의 독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한다”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주변국 지도자들은 독일의 통일에 대해 결코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정학적 특수

성 때문에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터가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남북간 상호협력을 통한 연착륙이든, 아니면 예기치 않은 경착륙이든, 남북한의 통일은 기존 세력균형의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주변국가들의 선호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얼마만큼의 국제적 협조를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최대의 관건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가지는 것은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변국들은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지도 모릅니다. 어떤 서방의 분석가들은 핵을 가진 통일 한국은 주변국들에게는 하나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 군인 숫자를 통일 전 동서독 군대의 합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여버린 점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많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식의 감정적 민족주의가 오히려 무궁화 꽃을 시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 비확산의 문제가 서방 강대국들의 핵 이기주의의 소산일 뿐이니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최하는 토론의 자리가 갖는 의미는 이처럼 핵 비확산이라는 주제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이 땅 위의 평화달성을 위한 큰 기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